

양극화와 전환기의 한국 사회: 시민정치에 대한 한 제언

김보영 _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I. 들어가며—시민정치의 위기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제해야 할 것은 이 글은 제목처럼 어떤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언을 위한 글이다. 물론 이는 본인이 이제 막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입장에서 어떠한 결과물과 주장을 내세우기에 부족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정치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것이 미쳐 정치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각종 개혁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되거나 견인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소위 민주정부 집권기간은 한편으론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혁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한계를 노출시키는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줄곧 시민사회는 권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평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

만 정권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재 지속적인 실책과 신뢰의 상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보수정권의 독주가 미약한 야당세력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시민 사회에서의 대안조차도 별다르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개별 개혁 정책이나 이슈를 넘어 무언가 큰 그림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합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담론에 대한 신뢰는 상실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이나 담론이 없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권력과 수단을 가진 세력이 약한 정당성이라도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민정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뚜렷한 기반 없이 던져보는 것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새로운 담론의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우선 시민정치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II. 운동정치에서 시민정치로

우선 시민정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한 ‘운동정치’(조희연 2001)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지난한 독재의 역사 속에서 급격한 경제개발과 사회변동에 따른 대중의 욕구는 갈수록 협소해 지는 제도권 내 정치로는 수용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운동정치’가 발달하게 되었다. 민주화의 과정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권 정치가 점차 협소해짐에 따라 기존 제도권 정치세력조차 운동정치에 결합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동정치가 제

도권 정치를 압도함으로서 민주화과정으로 제도권 정치의 억압적인 구조가 보다 수용적인 민주적 정치제도로 전환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결과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회적 욕구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민주적 제도들이 도입되고 일련의 개혁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조희연(2001)은 오히려 ‘정치지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여전히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이 제도권 정치를 통해서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기존 계급적 개념이 중심이 된 이른바 민중운동과는 차별성을 이루는 시민운동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미 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고, 그의 확대와 노동계급 정당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순기능적 정치제도를 정착시킨 후에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서구의 신사회 운동과 이해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시민운동의 영역은 계급정치까지 흡수한 정치와 정부의 국가 영역, 그와 어느 정도 분리된 시장의 영역으로 발달한 경제영역과 다른 제3의 영역으로서 발달하였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일반적 사회적 욕구가 제도 정치권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런 정치권과 정부와 여전히 어느 정도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영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미진한 두 영역의 보완적 영역으로서 시민운동이 존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국내 정치에 있어서 사회정책이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선거를 포함한 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 정당 간 중심 쟁점이 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근 10여 년간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면 상당 부분의 정책 논의와 개혁들이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 촉발되거나 견인되어온 것을 볼 수 있다(이영환 2001).

이러한 점에서 시민정치는 기존의 운동정치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정치가 ‘시민의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시민적 정치’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적 요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고 반영되는 촉구하고 견인하는 ‘시민적 정치’로 더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로 이해될 수 있는 ‘시민의 정치’는 이전 집권 정치세력

이 주창하고 있는 ‘시민주권’ 개념에 의한 시민정치운동과도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같이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정치의 접근은 오히려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그 ‘참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지칭하는 정부까지 가져보았지만 그 참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설명받아본 적이 없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성취했던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참여를 주장한다는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는 어떤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치주체의 책임이 방기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인 말로 모든 것이 시민 참여로 해소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인 같은 전문 정치영역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화하고 대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흔히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육, 소득, 자원, 사회적 지위 등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정치 제도적으로 노골화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것이다(최장집 외 2007). 참여를 새로운 정치적 비전인 것처럼 제시하는 주장은 뒤집어 말하여 현재 제반의 사회문제가 참여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존 정치주체의 대안과 비전의 부재를 오히려 대중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나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별다른 대안 없는 참여에 대한 집착은 공허한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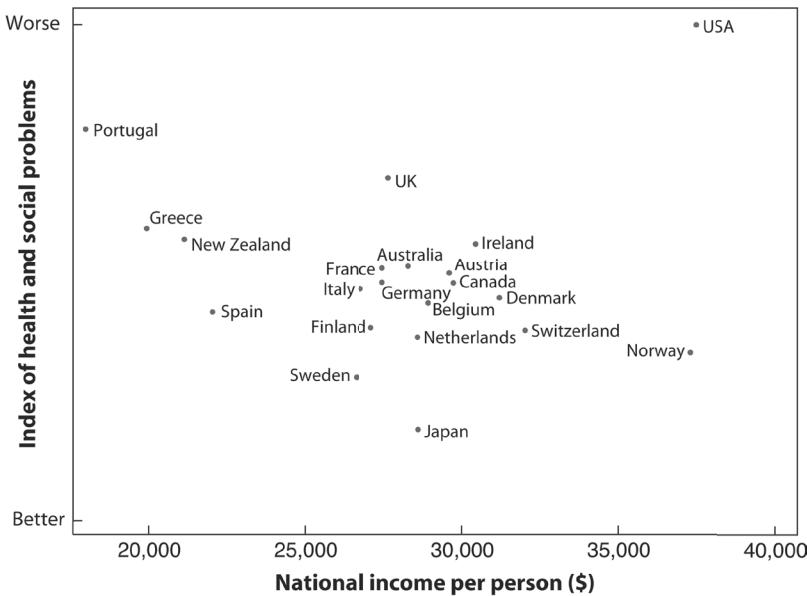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여전히 시민적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지체된 제도적 정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위치하게 된 시민정치에서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시민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분명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시민’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혁적이고 능동적인 집합적 의미의 대중을 의미한다고 할 때(박상필 2001) 그

것이 단순히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나 연구자로서 표면적인 현상적 욕구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본질적 사회적 요인과 맥락을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이전 민주화 직후 모든 분야의 사회발전이 절실한 시절, 국외 선진국에서 발달된 새로운 개념과 이론적 이해가 적당히 유효했던 그 때 그 시절과는 달리, 웬만한 사회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이미 경제 수준이 10위권을 누리며, 환경, 에너지, 경제, 고령화 등 전 세계적인 도전이 지배적인 지금, 단순한 해외 이론의 차용으로는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담론의 생산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현재 대란 담론이 부재한 시민정치의 위기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



〈그림 1〉 세계 주요 선진국 간 보건사회지표와 불평등도의 관계(Wilkinson & Pickett, 2009,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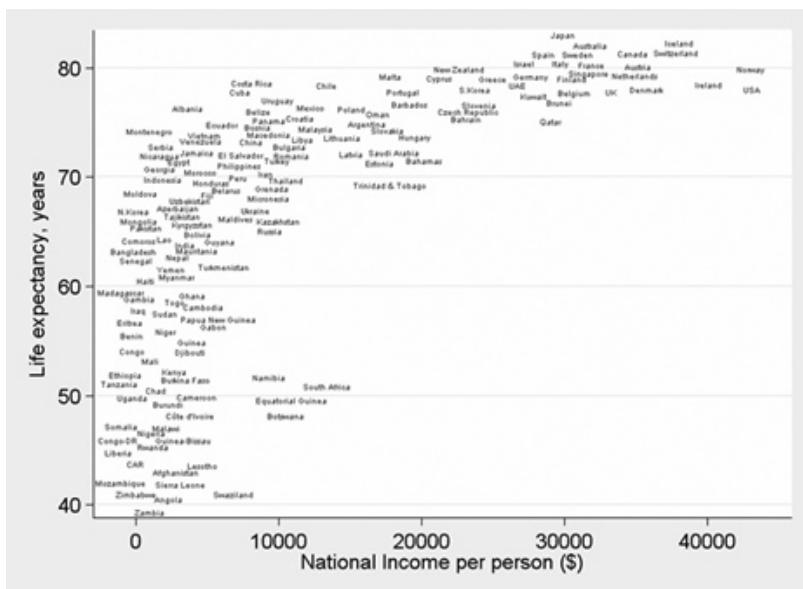
〈그림 2〉 세계 주요 선진국 간 보건사회지표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 (Wilkinson & Pickett, 2009, p. 21)

얼마 전 영국의 두 보건학자에 의해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Wilkinson & Pickett 2009)라는 대중 서적 출판과 함께 이 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Equality Trust(<http://www.equalitytrust.org>) 설립까지 이어진 이 연구 결과는 그 동안 가정의 수준으로 존재했던 주장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본래 보건 평등에 대한 것으로 출발했지만 불평등이 서로 다른 계층의 건강문제를 결정짓는 수준을 떠나서 그 전체 사회의 전반적인 보건과 사회문제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이들은 우선 사회의 신뢰도(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문장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 약물과 알코올중독을 포함한 정신건강,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비만, 아동교육 성취도, 십대 임신, 살인, 수감률, 사회이동성 등 거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동

원하여 보건사회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소득이 높은 50개 국가 중 일정 인구규모 이상인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지표의 결정요인으로 바로 다름 아닌 사회 불평등도(5분위 소득분배율)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사회 불평등과 보건사회지표와의 관계는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우 분명한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통적 의미에서 '성장'과 '분배' 논쟁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기도 하다. 다소 놀랍게도 경제 수준의 지표가 되는 1인당 국민소득과 보건사회지표와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혀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아래의 〈그림 3〉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만 달러 안팎의 수준까지는 보건의 기본적 지표인 기대수명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하지만 만 달러 수준을 넘기 시작하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 효과는 급격히 줄어든다.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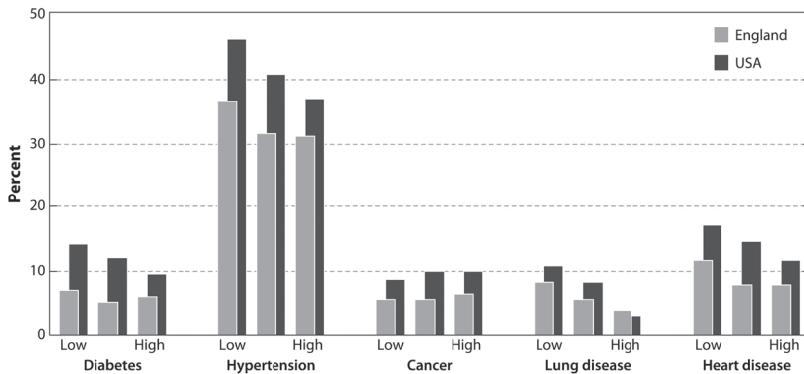


〈그림 3〉 1인당 국민소득과 기대수명 간의 관계(Wilkinson & Pickett, 2009,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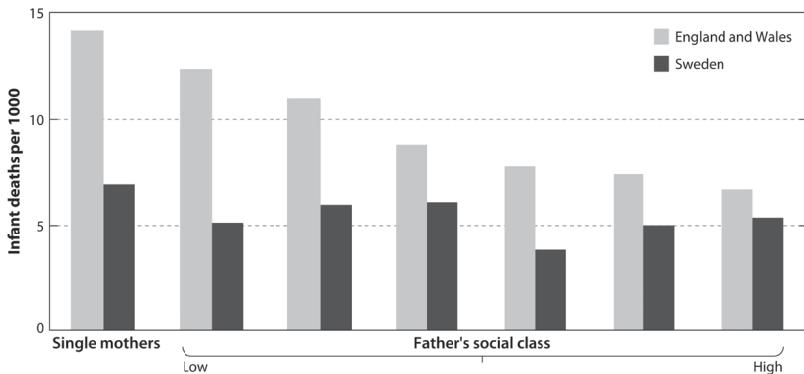
말해 건강과 사회 문제에 대한 ‘성장’의 영향력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서 는 매우 현격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사회적 논쟁에 대해 이제 이토록 명확한 증거가 등장하게 될 수 있는 배경으로 Wilkinson & Pickett(2009)은 근래 들어 매우 광범위하게 가능해진 국가 간 비교 가능 데이터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들은 아직 시기별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원인관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계열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사회 불평등의 확대가 건강과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200여 개의 스트레스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어떤 스트레스 요인보다도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 평가적 위협(social-evaluative threat)’이 보다 크고 명확한 코르티졸(cortisol,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코르티졸은 장기간 방출 시 비만, 고혈압, 만성피로, 만성두통, 면역력 약화 등을 불러온다. 결국 사회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 평가적 위협에 더욱 노출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지 저소득층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그 효과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4〉는 각 교육 수준별 질병유병률의 미국과 영국 간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보이듯이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보다 전 사회계층에서 당뇨,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 다양한 주요 질병 유병률이 대부분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림 5〉는 가장 평등한 국가군에 속하는 스웨덴과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국가군인 영국 간의 영아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 계급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스웨덴보다 높게 나오고



〈그림 4〉 교육수준별 각 질병유병률의 미국과 영국 간의 비교(Wilkinson & Pickett, 2009, p.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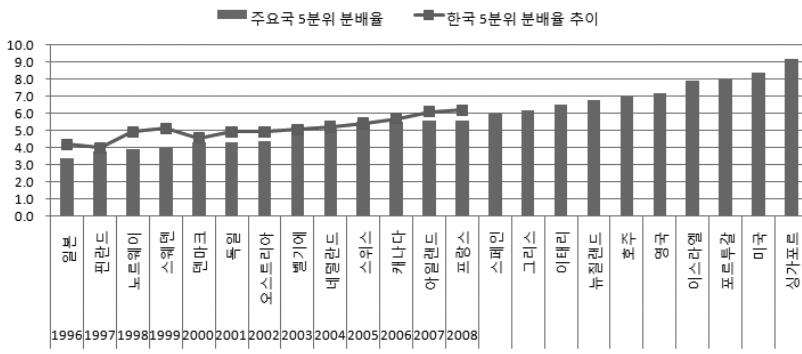
〈그림 5〉 스웨덴과 영국 간 아버지의 사회계급에 따른 영아 사망률 비교(Wilkinson & Pickett, 2009, p. 184)

있다. 또한 흥미로운 지점은 불평등도가 높은 영국의 경우 사회계급에 따른 영아 사망률 간의 관계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스웨덴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사회불평등이 결국 저소득 계층에 게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즉 같은 부자라도 평등한 사회에 사는 부자가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부자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은 부자마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

다는 것이다.

IV. 양극화, 전환기의 한국사회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은 물론 어느 나라에나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불평등도가 심각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비롯하여, 각종 정신질환과 보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평등한 국가 수준으로 불평등도를 감축시키면 정신질환은 2/3가 감소하고, 수감자는 자그마치 75%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함의는 오히려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라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양극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5분위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할 때 1996년에 4.17 수준이었던데 반하여 2008년에는 6.2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교하자면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 10년 만에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서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단순히 상대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약물중독을 비롯한 정신질환, 영아 사망, 살인, 수감자, 십대 임신, 비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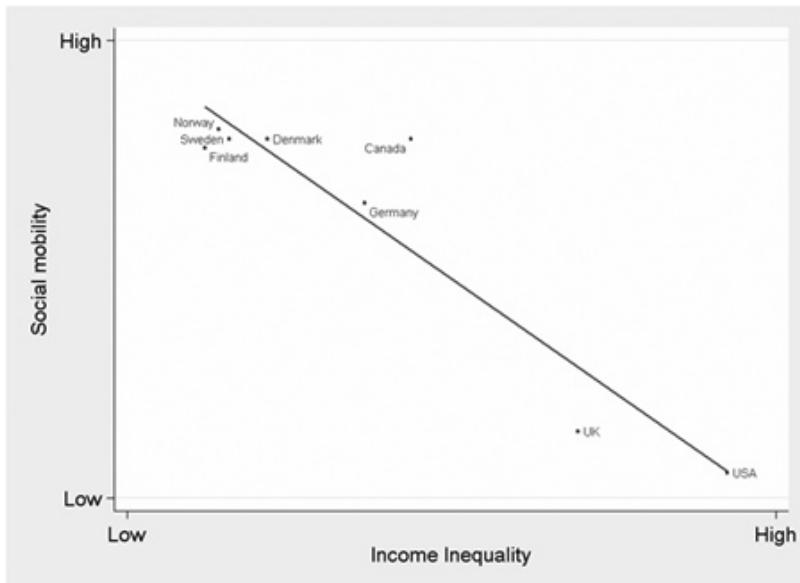


<그림 6> 세계 주요국의 불평등도와 우리나라 불평등도 추이 비교
자료: UNDP (2007), 윤태호 (2009)

이 늘어나고 사회 신뢰도, 사회적 이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그다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들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는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 등으로 사회계급이 형성되어봤자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그 계급의 역사가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수한 서구의 복지국가에 비해 이에 수반되는 사회문제는 오히려 덜 겪어왔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계급에 따라 뚜렷한 패턴을 나타내는 그 혼한 마약문제도 아직 연예인 따위의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심각한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비행을 우려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사회적 변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간이 전해지는 뉴스에서 보듯이 점점 새로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 들어 처음 겪는 급격한 양극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그 전의 사회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적 전환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불평등도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다룬 시계열적인 연구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재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문제이다. Wilkinson & Pickett (2009)가 설명하듯이 사회 불평등이 구체적인 사회보건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불평등한 환경이 스트레스 등 사람들에게 사회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러한 사회심리적인 영향을 자식에 대한 교육으로 해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현재 계급과 상관없이 자식의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인생역전이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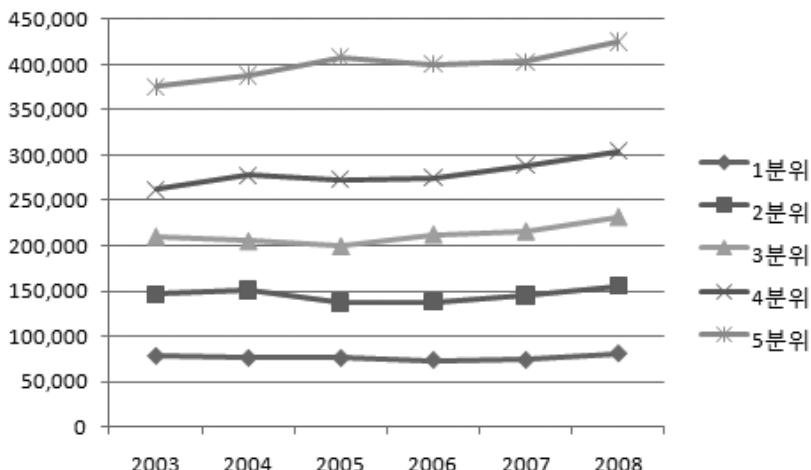
〈그림 7〉 주요 8개국의 사회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Wilkinson & Pickett 2009)

이러한 변화가 불평등의 증가와 무관할 수 없는 이유는 보건사회지표에서도 보이듯이 이미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불평등도와 사회이동성과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이다.

런던정경대학에서 Blanden 등이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8개국에서 진행한, 출생 시 아버지의 소득과 30세 때의 소득을 비교한 대규모 표본의 시계열 연구 결과와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불평등이 심할수록 출생 시 아버지 소득과 30세 때의 소득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제 결과적 불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야 하지만 결과적 불평등이 줄어들면 기회의 평등 역시 급격하게 협소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시켜보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을진대 사교육비가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불평등의 확대에 따라 사회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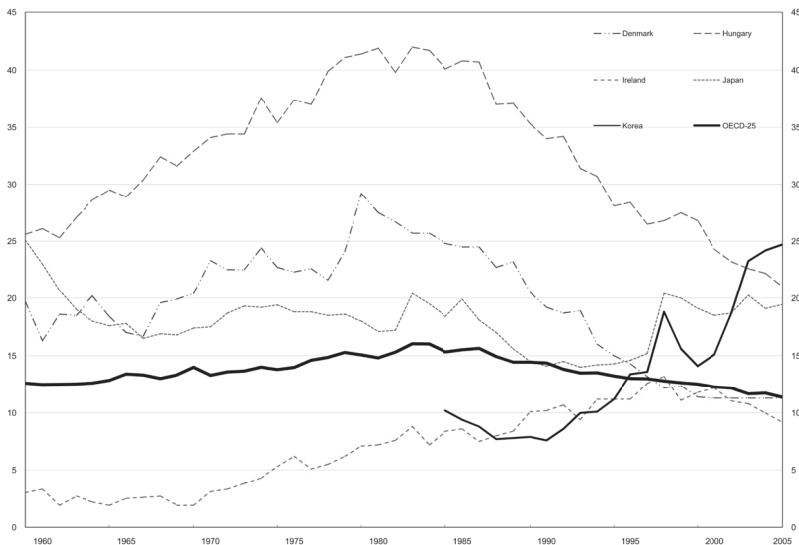
성의 통로가 좁아지고 그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2008년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시계열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불과 4년 만에 사교육비가 무려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연합뉴스 2008), 특히 소득 계층별로 교육비 증가 추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그림 8>에서 보이듯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교육비 증가 추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높을 계층에서는 그 증가 추이가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사회계층의 욕구를 자식에게 투여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로 사회계층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비용을 따라잡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하는 계층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전반적인 가계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다른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현상유지 되거나 줄어드는 반면 유독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창민



<그림 8> 소득 분위별 실질 교육비 지출 추이(5분위)

자료: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그림 9〉 OECD 주요국 자살률 추이(OECD, 윤태호, 2009에서 재인용)

2009). 지출 감소 때 교육비 감소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특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낮은 소득계층에서 경쟁을 결국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그동안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해소되던 불평등의 사회심리적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사회에 투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쩌면 불평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억제되었던 그 영향이 일시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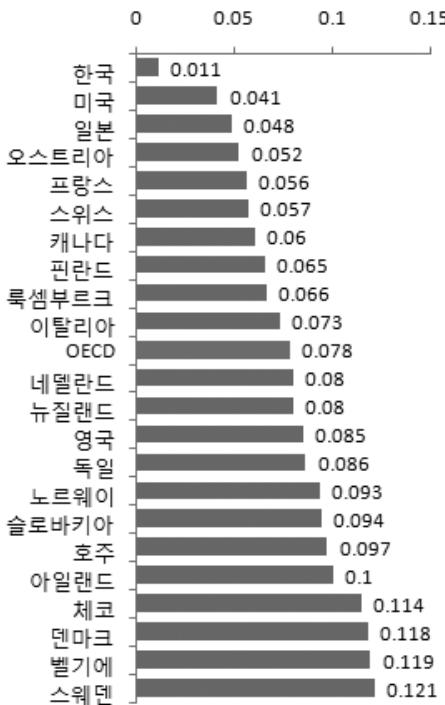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은 자살률이다. 〈그림 9〉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 90년대 중반까지 매우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양극화가 증가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것이 양극화의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윤태호 2009) 기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보건사회지표

중 유일하게 사회불평등도의 증가에 따라 개선되는 것이 바로 자살률이기 때문이다(Wilkinson & Pickett 2009). 이러한 현상에 대해 Wilkinson & Pickett(2009)은 사회가 더 평등할수록 자신의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살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그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되어 살인의 증가 등 폭력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 폭등 현상은 기존 평등도가 높았던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아직까지 불평등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가 자기에게 향하여 그것이 다른 급격한 폭력적 형태보다는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사회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앞서 말한 대로 그러한 사회심리적 영향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살률의 증가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보다 타인을 향한 보다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Wilkinson & Pickett(2009)의 연구에 있어 또 하나의 더욱 결정적인 함의는 일본에서 나온다. 놀랍게도 가장 평등한 대표적인 국가로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과 함께 일본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그림 6>에서 보이듯이 오히려 5분위 소득분배율에서 일본은 스웨덴보다도 평등한 국가로 나타난다. 그 결과 전 보건사회지표에서 일본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물론 국제 비교가능 데이터들이 모두 2000년대 초의 것이라 최근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림 10>에서 보이듯이 분배의 수준에서는 스웨덴과 일본은 거의 정반대에 있다.

즉 현금 이전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는 스웨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일본은 가장 하위군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별다른 분배 없이도 이미 그 이전, 소득의 평등을 이루었기 때문에 같은 분배 수준을 가진 미국과는 보건사회문제에 있어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제도적인 복지 정도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불평등 정도가 그 사회를 결정짓는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양극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함의는 더욱 정



〈그림 10〉 현금 이전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 (OECD, 윤태호, 2009에서 재인용)

크게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박한 평가를 꺼리거나 아니면 그 시급성에 대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일 수 있다.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통한 분배나 계층화에 대한 완충장치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소득 양극화는 결국 그 불평등의 효과에 대한 별다른 장애 없는 전면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저 급한 수준의 복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없었고, 그로 인해 복지를 경시하거나, 중시해도 당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확하게 드러난다. 그동안 우리는 꾸준히 OECD 국가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최하위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그렇지 않아도 유지되는 사회 평등이 있었기에 그에 의한 후과를 경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학계조차도 복지확대에 대해서 당위적 수준에서 주장해 왔지만 정작 그 시급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전 10여 년 동안 복지가 꾸준히 확대되긴 했지만 그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양극화와 그에 동반해서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에

V. 시민정치의 과제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환기에 있어 시민정치 영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담론도 명확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대부분은 우리 사회 현재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기보다는 해외 선진국의 담론을 수입하여 적용해 본 것이거나 추상적 수준에서 던져보는 수준을 크게 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짧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리고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 지구적 위협뿐 아니라 당장 유례없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그 누구도 뚜렷한 답이나 모델을 갖고 있지 않는 지금, 제 아무리 선진국에서의 담론이라도 과거의 전반적인 저발전 상태 때처럼 의미를 갖기는 힘들 것이다. 다른 추상적 수준의 담론들 역시 대중이 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에 대부분 공허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실 서구의 새로운 담론 출현 과정에는 그만큼 자기 사회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의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의미를 갖는 지점은 다른 사회의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산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시민적 요구를 정치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정치에 있어서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바로 그 시민적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인 표면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과정, 그 요구의 발생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반이 있고서야 그로 인한 결과를 전망할 수 있고 사회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가장 근원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양극화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이는 물론이거니와 그로인한 사회적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다면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양극화가 어떻게 왜 진행되고 있는지, 직장 내 격차, 직업군 내 격차, 직업군 간 격차, 고용 형태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연령대별, 지역별, 사회계층별 소득분화 경향 등의 분석을 통해 어느 곳에서 구체적으로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전체 양극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양극화 추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의미 있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의 경향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에 있어서는 최근 점차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지고 있는 각종 사회경제 통계 데이터들과 패널 데이터들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과 함께 인터뷰, 포커스 그룹, 임상 실험, 블로그 및 카페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들이 생산한 텍스트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해서 교육, 생활양식, 문화, 소비양태, 계층 간 인식, 사회적 태도와 인식, 스트레스, 행동양상 등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사회학적, 정책학적, 심리학적, 보건학적 연구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에 대한 영향, 양상, 결과 등에 대한 연구로 현재의 변화, 원인관계, 향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와 전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와 담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국가 간,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Wilkinson & Pickett(2009)의 연구는 이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적이라기보다는 출발점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문제들 간의 상관관계와 그 양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점차 더 다양하게 가능해지는, 그리고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국가 간 비교 가능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

어 가령 복지레짐별 비교 연구와 같은 그 사회의 문화, 역사, 제도 등을 보다 반영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던 남미, 동구권 등의 국가 사례에 대한 역사적 연구 또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할 수 없는 무리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 지금과 같은 공허한 논의, 일부의 주목에 그치는 아이디어 수준의 담론의 반복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제도적인 학술연구 지원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시민운동적 전략으로서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다. 하지만 몽상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오창민, 2009, “불황 모르는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 경향신문 7월 16일자.
박상필, 2001, 『NGO와 현대사회』, 아르코.
연합뉴스, 2008, “초중고 77%가 사교육 … 연간 비용 20조원”, 2월 22일자.
윤태호, 2009, 『한국의 사회불평등 현황과 과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월례토론회.
이영환, 2001,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인간과 복지.
조희연 편,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최장집·박상훈·박찬표,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통계청, 2009, 『2008년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통계청.
UNDP, (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Wilkinson, R., &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Allen Lane.

김보영(Kim, Bo-Yung), boyung@boyung.net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지난해 영국 요크대학에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마치고 올해 초 귀국해 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강대학교, 서울여대 등에서 강의 중이다. 사회복지 정책 학회지에 「영국 블레어 정부의 정치사상에 대한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과 전략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 하였다.